

# “새만금 SOC 예산 전액 복원해야”

### 도의회, “삭감된 중앙부처 예산안 6626억원 전액 반영을... 국제공항 빠진 예산 의결 반대” 강조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전액 복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챔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 사업예산 6,626억원 중 78%에 해당하는 5,147억원을 삭감했다”며 “국회는 2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예산을 전액 복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응단은 이날 “전국 500만 전북인과 시민·사회단체, 새만금 입주 및 투자 고민 중인 기업들이 가슴 졸이며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챔버리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각종 안전·환경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덕도 신공항에는 올해보다 40배나 많은 5,363억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갈라치기’, ‘예산 쪼개기’인 만큼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심의·의결권을 행사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챔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응단은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내년도 착공을 앞둔 국책사업인데도 당초 부처안 대비 고작 11%의 예산만 반영되었다” 설명한 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정상 복원 없는 예산의결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부안)은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우리 전북인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며 그 결과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출범 이후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 사업, 6,626억 원 예산 전액 복원을 주장하며 국회 항의 집회, 도의원 사발, 릴레이 단식농성 및 마라톤 투쟁, 국회 예결위 면담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대응단은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활동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선거구 축소 책동 멈춰라”

### 김정기 도의원, 총선 전북 10석 유지 재확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13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에서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국가의 근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을 희생양 삼아 1석을 감축하고 수도권에 1석을 증축했다”며 “전북선거구

구 축소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선거구 10석 유지로 재확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기 의원은 “헌법에서 정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생략) 확정’하도록 한 규정과 제2항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과도 현저히 불일치하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기준으로 정한 ‘수도권 증식 지양’ 원칙에도 반하고,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즉시 폐지하고 10석 유지를 골자로 재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챗GPT의 이해와 AI의 미래’

### 도의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강연

전북도의회는 13일 ‘제6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을 강사로 초청, ‘챗GPT의 이해와 AI의 미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챗GPT의 상상을 뛰어넘는 연산능력과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우리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개인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숙제”라며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강의에 앞서 “AI의 도래는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지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남원 시의회 전평기 의장(사진 오른쪽)이 대한민국의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남원 시민의 염원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사발 시위, 수차례의 국회의원 면담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데 대해 높이 평가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전평기 의장은 “이 상은 지방자치를 위해 더 힘쓰라는 의미로 알고, 남원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민의를 경청하고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올해의 우수 의원상 시상식. (사진 왼쪽부터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박정규 의원, 박정희 의원, 윤수봉 의원,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

### 박정규·박정희·윤수봉 도의원

# 도의회 민주당 올해의 우수 의원상 수상

### 새만금 SOC 예산 복원활동 등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

### 도민 복리증진과 민생안전 위해 헌신, 교섭단체 위상 제고

전북도의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윤정훈 의원은 전북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우수 의원상’ 수상자로 박정규의원, 박정희의원, 윤수봉의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 의원상”은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교섭단체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했다. 윤정훈 의원은 “먼저 ‘올해의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새만금 예산 복원활동, 교섭단체의 위상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의 우수 의원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상식에 참석한 국주영은 의장은 “올해의 우수 의원상” 축하인사와 함께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도민을 지켜내는 의회가 되도록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임실)은 “새만금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마라톤 대장정에 자신의 힘을 쏟았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올해의 우수 의원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지역 사회 돌봄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임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식발과 릴레이 단식, 마라톤대장정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한 결실로서 ‘올해의 우수 의원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늘 성실한 자세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상식은 전북도의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부대표인 김성수·한정수·김승지 의원과 이병도(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의원, 장연국 의원(민주당 비례), 진형석 의원(교육위원)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재훈 기자

# 특자도 도시브랜드 최종안 확정

### 전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는 지난 12일 발표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마지막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상징물을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행차위 심의과정에서 개정 조례 안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모 기관 로고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디에상의 불필요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 안을 수정, 본회의에서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발전 의지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도내·외 각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위원회, △전북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참여단 전북+, △브랜드·디자인 전문 개발사 3축 체제의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개발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 인식조사, 토론회, 공모전, 원탁회의, 공청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장 디자인 후보안 4가지와 브랜드 슬로건 후보안 3가지를 도출하였으나, 지난 11월 △전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청원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한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이 모 대학교 로고와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 디자인 유사성의 여부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등의 법적 검토 의견을 통해 “기본적인 시각 프레임은 특정 권리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북도의 경우 이미 사용중인 상징물을 응용 개발, 각각의 색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차별성이 있으므로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으며,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양 디자인은 출원번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 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상징물을 공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많은 의견이 나오는 듯 하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새 상징물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공영방송 정상화, 대통령이 나서라”

### 도의회, 윤영숙 도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윤영숙의원(익산3)이 발의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이 13일 열린 2023년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언론통제 및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의 공언(公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우리 사회에 불쾌한 공명만 남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 난맥상 중에

서 언론통제 망령의 부활이 가장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장악 기술자’로 악명 높은 위원장의 지휘하에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개편을 포함한 수십 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대범함을 보여준 바 있다.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언론통제 망령이 되살아나는 신호탄이었고, 최근 ‘뽕운 뉴스’라는 보도 현 정부 언론통제의 산물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또 “후임 방북위원장이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것은 상식의 언어로는 답이내기 어려운 행태”라면서, 신임 방북위원장 내정의 즉각적인 철회 등을 촉구했다.

# “청각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수립을”

### 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13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너진 농교육 정상화 및 청각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면서 2023년 기준 청각장애학생의 80.3%(2,335명)이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으로 수업통역과 자막, 속기 등의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고립과 격리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수업통역사가 배치되고, 2015년부터 40개 주(州)에서 수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해 교과목을 신설했고, 영국과 일본은 일부 농학교에서 이중언어로 농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수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통역 지원 활성화 및 전문 교육통역사 제도 도입,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